

이덕일의 '역사의 창'



독립선언과 독립청원

1919년 3월 1일 고종의 인산일(因山日)에 맞춰 봉기하려던 거사는 당초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개신교계의 움직임이고, 다른 하나는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계의 움직임이다. 1919년 1월부터 파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뒤처리를 위한 강화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기본 원칙이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기한 14개조의 평화원칙이었다. 그중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전해지면서 일제강점기의 한국 개신교계는 크게 고무되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지배나 간섭을 받지 않고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결주의는 한국의 개신교계에 복음처럼 받아들여졌다.

이 원칙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에만 적용되는 원칙이었지, 승전국의 일원인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는 해당하지 않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상주의적 성향의 한국 개신교도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크게 고무되어 거사를 결심했다. 그러나 개신교계는 독립선언이 아니라 독립청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독립청원과 독립선언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실상은 크게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독립선언의 주체는 선언을 하는 당사자 즉 우리 민족이지만, 독립청원은 청원을 받는 당사자 즉 일본이라는 점에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천도교계는 처음부터 독립청원이 아니라 독립선언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개신교계가 독립청원을 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독립선언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고, 마침내 개신교계는 이에 동의했다. 개신교계의 이승훈·함태영 등은 2월 22일경 천도교 지도자들과 회동해 "3월 1일 오후 2시에 탑골공원(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독립을 선언한다"고 합의했다. 일제의 '손병희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천도교 측에서 이때 5000원의 거사 자금을 기독교 측에 제공했다. 기독교계는 대부분 서북 지역 사람들로써 일시 서울에 왔는데, 독립청원을 선언으로 바꾸려면 조율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천도교계에서 보조해 준 것이었다.

천도교는 불교계도 참여시키기 위해 불교 혁신운동을 전개하던 한용운과 백용성을 합류시켰다. 유림도 참여시키기 위해 관측석 등과 접촉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경북 성주의 김창숙과 접촉했다. 김창숙은 자서전 '백용 73년 회상기'에서 고종 인산일에 거사하려 한다는 편지를 받았지만 모친의 병환 때문에 2월 그름에야 서울에 올라오니 이미 때가 늦었다고 회고했다. 김창숙은 '독립선언서'를 읽고 "지금 광복운동을 전개하는 데 3교의 대표가 주동은 하고 소우 유교는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있겠는가"라고 통탄했다. 이어 전국 유림 134명 명의로 한국

독립을 호소하는 '파리장서'(巴里長書)를 파리평화회의에 전달하는 '파리장서 사건'(1919년 4월)을 일으켰다.

3·1독립선언은 서양인 선교사들이 주도하면서 일제에 순응적이었던 천주교계를 제외한 주요 종교인들이 '민족'이란 기치 아래 하나가 된 거사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개신교인들이 천도교도 및 불교도와 하나가 되어 독립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민족대표 33인 중에 개신교계는 16인으로 2인의 불교계는 물론 15인의 천도교계보다도 더 많았다. 당시 개신교 신자수는 전체 인구의 약 1.1~1.3% 정도로 추측하니 20여만 명에 불과했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 수는 967만여 명으로 당시보다 50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20여만 명에 불과했던 1920년경에는 개신교가 타 종교인들로부터도 '민족종교'로 대접받았지만 지금도 그런 대접을 받는지는 의문이다.

한국 개신교는 한국 자본주의 발달사와 함께 하면서 물질적으로는 급속한 팽창을 이뤘지만 정신적으로는 도리어 쇠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도교계의 설득에 독립청원을 독립선언으로 바꿀 정도로 타 종교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줄 알았던 개방성과 상대성의 회복이 역사적으로 한국 개신교계의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의료칼럼

식품 알레르기



고영일 전남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교수

후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되기도 한다. 돼지·소·양 등 네 발 달린 짐승 고기를 먹고 나면 3-6시간 이후에 늦게 반응이 나타나는 '알파갈 붉은 고기 알레르기'라는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두 발 달린 닭과 오리 고기는 괜찮다. 닭뿔을 먹고 나서 전신 발진이 나타나는 '전신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도 있다. 음식물에 포함되어 산화방지제·표백제·방부제 역할을 하는 아황산염 성분이 전식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흔히 알레르기를 잘 유발하는 식품들에는 달걀, 우유, 메밀, 땅콩, 콩,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 굴, 전복, 홍합, 잣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식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생겨도 본인에게만 특별하게 알레르기가 생기는 음식물이 있다.

병력 또는 식품 일기 작성을 통하여 의심되는 음식물 종류를 확인하고, 피부 반응 검사와 혈액 검사를 시행해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 성분이 몸 안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검사 등을 통해 병력과 일치하는 음식물을 찾는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직접 식품을 소량씩 단계를 높이면서 섭취한 후 증상을 확인해 보는 유발 검사를 시행한다.

음식물을 먹고 발생한 알레르기 증상은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등 항알레르기 약물을 사용하여 증상

을 없애 준다. 해당 음식물을 앞으로 먹지 않으면 되지만, 현실에서는 완벽하게 회피하는 것이 어렵다. 자기 모르게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약을 처방할 수 있다. 가벼운 피부증상에는 먹는 약만 주지만 호흡 곤란, 혈압 감소 등의 아나필락시스에 대해서는 휴대용 '자가 주사 에피네프린'을 처방하여 비상시에 사용하도록 교육한다.

좀 더 근본적인 치료로는 체질을 바꾸어 주는 면역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땅콩·우유·달걀 등 몇 가지 음식물에 대한 '경구 면역 치료' 임상시험이 최근 효과적임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은 매우 소량만 먹어도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음식물 섭취를 절대 회피해야 한다. 알레르기 성분이 비슷한 '교차 음식물'도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알레르기 예방을 위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제품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고시하고 있다. 또한 제품이 해당 식품을 직접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식품과 같은 제조 과정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알레르기 식품 성분이 혼입될 수 있다면, 이러한 가능성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어떤 음식물이든지 섭취하기 전에 항상 '식품 표기 라벨'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 목록'(https://www.mfds.go.kr/brd/m_512/list.do)에 가면 라벨을 확인하는 참고 자료를 볼 수 있다.

기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혁신 대학을 꿈꾸며

적 보편 교육으로는 시대의 요구에 답할 수 없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이다. 연구·창업 중심의 강소형 대학이자 교육과 연구가 산학연으로 연결되어 창업을 이끄는 오픈 플랫폼을 목표로 한다. 기존 대학은 학문의 상이탑이라는 이유로 사회·기업과 분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기업·연구소와 함께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허브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한국에너지공대의 특수성은 연구 부문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 대학은 에너지 AI, 에너지 신소재, 수소에너지, 에너지 기후·환경,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의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되 학문 간 장벽을 넘는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상의 연구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전적·창의적 연구는 기술 혁신과 창업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은 다시 연구 개발에 재투자될 것이다. 에너지 분야의 석학과 젊고 패기 넘치는 교수·학생·연구원이 우리 대학으로 몰려 활기 넘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 방식도 기존 대학과는 확연히 다르다. 단절된 학과 중심 교육, 지식 전달 위주의 일방향 교육으로는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 우리 대학은 단일학부로 구성되며 교수와 학생의 양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키워 낼 것이다. 고등교육의 핵심은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급변하는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혁신적 교육체제와 지속형 대학 시스템을 통해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여 세계 에너지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대의 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의 자율성과 안정적 재정 확보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대법 제정이 필수다. 이 법은 학사 운영, 학생·교직원 선발 등 대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율성 및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다. 현행 고등교육법 하에서는 기존 대학의 경직된 교육체제와 연구 문화를 벗어나기 어렵다. 또한 설립 이후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빠른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평생을 교육자와 연구자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혁신을 주도할 한 대학의 설립을 이끄는 일은 가슴 설레는 도전이다. 한편 초기에 교육과정, 학사 운영 체제와 연구 인프라, 캠퍼스를 설계하고 대학의 체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기존 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새로운 대학에 대한 기대를 안고, 한국에너지공대의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탄생할 대학을 반드시 선보이도록 하겠다.

社說

존폐 위기 몰린 지방대 희생 대책 절실하다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의 올해 신입생 등록 마감 결과,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미달 사태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의 거센 파고가 지역 대학들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는 신입생 모집 정원 4207명 중 4067명만 등록해 140명이 미달했다. 등록률은 96.7%로 지난해 99.9%보다 하락했다. 광주 융복합 퍼스의 경우 83개 학과 중 사범대 일부 학과가 처음으로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고, 22개 학과가 정원에 미달했다.

조선대의 신입생 등록률도 97.1%에 그쳤다. 모집 정원은 4350명이었으나 4222명이 등록하면서, 전체 76개 학과 중 32개 학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호남대는 1689명 모집에 1520명(90.0%)이 등록해 169명이 부족했다. 또한 광주대는 90.4%, 동산대는 92.3%의 등록률을 기

뤘다. 이처럼 미달 사태가 속출하자 지역 대학 관계자들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등으로 신입생 총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은 했지만 그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문제는 저출산 가속화로 이러한 학생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돼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대의 위기는 교육부가 1996년 설립 기준을 완화해 대학 난립을 부추긴 교육정책 실패의 결과다. 여기에 수도권 소재 대학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지방과의 격차가 커진 것도 한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등 희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역 대학들 역시 학교 통폐합이나 수요자 중심 교육 강화 등 자구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청년 세대의 '쓸쓸한 죽음' 더 이상 없도록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2030 청년세대가 늘고 있다. 어느 '특수청소' 업체 운영자가 전하는 한 30대 청년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목표의 한 다세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1주일 정도 지난 후에야 발견됐다. 집안에는 쌀이 전혀 없었고, 냉장고에도 먹을 것도 보관돼 있지 않았다. 대신 거실 바닥에는 채무 이행 판결서, 각종 독촉장, 카드연체 통지서 등이 흩어져 있었다고 한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자'여서 '특수청소' 업체에 의해 그의 마지막 흔적이 정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보건복지부가 다들 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월 전국의 자살 시도자는 1만5090명(남성 5735명, 여성 9355명)이었다. 이중 20대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2951명→4213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전체 자살 시도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다.

이처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취업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간 취업을 못하고 좁디좁은 공간에서 홀로 생활하며 가족과의 단절이나 사회적 고립감·우울감 여기에 경제적 박탈감을 겪게 되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노년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펼쳐 왔다. 더불어 이제는 청년 상당층에 내몰린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월 전국의 자살 시도자는 1만5090명(남성 5735명, 여성 9355명)이었다. 이중 20대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43%(2951명→4213

無等鼓

동양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이룬 나라는 일본이다. 서양의 제국주의를 모방하기 시작한 일본은 한반도를 통해 대륙 진출을 꾀했다. 이를 위해 일제는 한반도와 만주를 잇는 철도를 자신들이 직접 건설하는 데 엄청난 공력을 기울였다. 1892년 경부철도에 대해 비밀 측량을 한 일제는 1894년 8월 20일 체결한 한일장정합동조약의 첫 번째 항에 경부·경의 철도 부설권을 언급할 만큼 집요했다.

프랑스·영국·러시아도 철도 부설권을 호시탐탐 노렸다. 이들은 경부선보다 오히려 경목철도 즉 지금의 호남선에 눈독을 들였다.

불균형 정책

중국과의 접근이 수월하고 곡창지대인 호남의 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대한제국이 1898년 6월 독자적인 경목철도 부설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 것은 경부철도에 이어 경목철도까지 열강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다는 절박함의 발로였다.

일제는 대한제국이나 다른 열강의 철도 부설을 막기 위해 경부철도의 노선을 이상하게 만들었다. 1885년과 1892년 두 차례 답사를 통해 일제는 다섯 가지 안을

만든 뒤 군사·경제적인 측면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그 결과 대전을 경유지로 선택했는데, 여기에는 호남선을 지선으로 만들어 경부선에 예측하면서 동시에 별도로 호남선을 신설하려는 시도를 아예 막아 버리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지역개발상 심각한 불균형이 누적되는 경제 공간의 기본 틀이 이때 만들어진 셈이다.

일제의 한반도 장악과 대륙 진출을 위한 군사·경제적인 축이 곧 경부선이다. 하지만 일제가 몰라간 뒤 이제는 경제성을 위주로

한 성장 전략이 경부라인을 더 키우고 있다.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구 남선에 눈독을 들였다. 더 밀어주는 방식의 국가 재정 분배가 균형의 추를 더 기울게 한 것이다. 해방 76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일제가 남긴 이 불균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과거 불균형 정책을 넘어서지 못하는 국가 균형 발전은 공염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반시설 및 산업이 미진한 지역에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아닌가.

/유현성 정치부 부장 chadol@



윤의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설립추진위원장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혁신을 필요로 한다. 오랫동안 교육에 몸담아 온 필자의 판단에 가장 혁신이 시급한 곳은 교육시스템이다.

'교육혁명'의 저자인 세계적인 교육학자 켄 로빈슨 교수는 "교육의 개선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 망가진 모델을 개량하는 것뿐인 개선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울린 공대나 미네르바 스쿨 등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대학 모델을 제시하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바꾸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대학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육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올해 출범한 미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을 필두로 강력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플랜은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향후 4년간 청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2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혁신 인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구시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